새정부 정책 '지역균형발전' 역행

지방 현실 외면 경제 낙후 더 심해지나

수도권 규제 완화 무안 기업도시 악영향 불보듯

해수부 폐지 광양항 개발·엑스포 지원 제대로 될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에 지방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방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호남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을 조명해본다.

◇**수도권 규제 완화**=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 정부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 정책으로 지방으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면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재정경제부는 항공기·광섬유 등 첨단업종의 공장을 수도권에 신·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산업자원부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를 인수위에 보고하고, 관련법 폐기를 추진 중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바탕으로 하는 무안 기업도시 조성 사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장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지방에 더 많은 투자가 되게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 도시들을 묶어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기반시설을 설치, 자연히 신규 투자가 따라오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버금가는 기반시설 구축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기업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최소한 지방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및 공기업 민영화**=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및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방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해양수산부 폐지로 광양항 개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며 여수엑스포 지원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한미 FTA로 개방의 파고에 직면한 전남 농민들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고 있다.

특히, 정부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청와대가 직접 챙겼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 광주지역 민심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광주의 미래를 견인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 정책은 한전 및 자회사 이전을 기반으로 하는 나주 혁신도시 건설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부처 통폐합 및 공기업 민영화에 나서더라도 그간 진행된 혁신·기업도시의 골격은 흔들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입시 자율화 및 로스쿨 비율 역조정**= 대학입시 자율화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들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율화에 따라 입시전형이 과열되면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만 성적이 좋은 학생이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등 부작용으로 지방대 고사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학마다 전형방법과 기준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고교 서열화는 물론 사교육 시장의 팽창도 예견된다.

최소한 국가가 서울과 지방, 상위대학 간 중하위 대학 간 균형을 맞추고 조율하는 기능을 존속시키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대학을 배려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서울권역과 지방의 총정원 비율을 당초 '52대 48'에서 '57대 43'으로 변경한 점도 지방 대학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간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도권 경쟁력 갖기 위해 통합 필요"

박상천 민주당 대표 광주서 재강조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통합협상을 공식 제안한 데 이어 23일에는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를 찾아 또다시 통합협상의 당위성과 급박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9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신당과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합은 설 이전에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이전으로 통합시한을 정한 데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후보와 겨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반드시 설 이전으로 시한을 못박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또 "손학규 대표를 포함, 신당 지도부와 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교감이 있었다"고 밝히고 "현재의 구도대로 총선이 치러진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를 모두 한나라당이 장악하게 된다는 공동의 위기의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통합협상에 대해 교감을 나눴다는 신당의 지도부에 손학규 대표가 포함됐음을 확인해준 것이어서, 협상이 뜻밖의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표는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신당에 비해) 결코 불리하지 않다"며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이 호남에서 위기상황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혀, 통합협상이 민주당만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통합으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때문에 신당과의 통합을 제안하게 된 것일 뿐, 궤멸상태인 민주당의 탈출구를 찾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 대표는 앞으로의 협상과정과 관련 "총론에선 합의한 상태지만 각론에 대해서는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해 이번 협상에서 양당의 지분협상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한 듯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이번엔 협상단을 따로 만들지 않고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대통합신당 의원 통합 '동상이몽'

호남권 "공천·물갈이론 맞물려 반대론 솔솔"

수도권 "통합 통해 전통적 지지층 결집해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총선 이전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신당 내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의원들이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통합의 대의명분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우선 수도권 의원들은 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민주당과의 통합을 통해 수도권 내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견인,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다. 민주당과의 통합을 계기로 창조한국당과의 통합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별다른 계기가 없는 한 이번 총선에서 전멸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 깔려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불과 2천 표 내외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며 "통합을 통해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충청권 의원 그룹은 민주당과의 통합에 그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의 통합은 신당의 호남 색채가 더욱 강화되면서 오히려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민주당과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박상천 대표가 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색채가 강한 사람이 통합신당의 공동대표로 나서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충청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충청권 의원 그룹 일각에서는 민주당과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이회창 신당행을 검토하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남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우선 호남 민심이 통합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당장 통합으로 인한 공천 문제 등을 놓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호남권에서 최소한 민주당에 5석 이상의 공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호남지역 의원 30명 가운데 29명이 신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5명 이상이 공천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 민심이 물갈이론으로 결집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호남지역 일부 의원들은 "통합과정에서 미리 지분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로 민주당 견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 호남권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도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공천이 맞물려 있는 현재 상황에서 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며 "차라리 총선에서 각자 최선을 다한 후 총선 이후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